

# 전남대·조선대 ‘캠퍼스 빗장’ 왜?

## 학생 안전·학습권 위협하는 출근길 양체 통과 차량 통행요금 부과



1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에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10분 이내 출차 차량에 통과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대가 출근 시간대 캠퍼스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양체 운전자를 막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10분 이내 통과 차량’ 등에 통행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학이 지역민과 상생을 포기하고 돈벌이에 나섰다”는 억측이 나왔으나, 전남대는 “학생·교직원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결코 돈벌이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전남대는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주차 요금 제도를 개편하고 교내에 진입한 차량이 10분 이내에 진입문과 다른 문으로 나갈 경우 기본요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10분 이내내지라도 진입문에서 출입문까지 10~30분 사이에 출차하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30분을 초과하면 기본요금에 더해 현행과 같이 10분 초과시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현행 주차 기본요금도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

전남대는 “출근 차량들이 학교를 지름길 삼아 고속으로 통과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자체해 달라는 뜻에서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전 8~9시에는 교직원 출근 차량과 등교 학생들이 뒤섞여 교통 혼잡이 심한데, 외부 차량까지 가세해 혼란이 극심한 상태라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교정 내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사고 위험도 더욱 커졌다고 전남대는 밝혔다.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에는 한 달 평균 12만 2000여대의 차량이 진입했으며, 이 중 21.3%인 2

지름길마냥 교내 과속해 ‘위험’

‘10분 내 통과 차량’ 요금 부과

“돈벌이” 억측에 “안전이 우선”

오토바이 무법 질주 단속 호소도

만 6000여대가 10분 이내 통과 차량이었다.

특히 직장인 출근 시간인 오전 8~9시를 전후해 3분 이내에 캠퍼스를 통과하는 차량이 월 평균 6000여대에 달했고, 하루 평균 200여대가 출근시간에 교정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문(공대 기숙사)이나 동문(후문)에서 정문이나 서문(농생명대),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의 차량 이동이 집중됐다는 것이 전남대의 분석이다.

10분 이내 통과차량 가운데는 구간별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하는 경우도 적발됐으며, 구간별 최고 속도는 북문-동문 87km/h, 북문-정문 80km/h, 정문-동문 78km/h 등에 달해 캠퍼스 내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전남대는 밝혔다.

실제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10~15분 이내 교내 다른 출입문으로 통과 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조선대 또한 지난 7월부터 30분 이내 교내 통과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900원을 받기로 했다. 조

선대는 지역 대학과 지역민의 상생을 포기한 것이란 지적을 받았으나,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서는 막기 힘들어 반쪽짜리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내를 지름길처럼 이용하는 것은 출근 차량뿐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도 심각하다”, “신호 없고 목적지까지 단시간에 갈 수 있다며 교내에서 무법지대로 달리는 오토바이부터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기숙사(생활관)에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생활관 뒤 쪽문에 개방 제한 시간을 뒀으나, 배달 기사들이 교정 곳곳의 쪽문으로 드나들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지속 계도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정면에 번호판이 없으니 주차 시스템에 인식되지 않고 쪽문과 사잇길로 다니다 보니 실제로 잡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며 “연구실과 교실 등지에서 배달을 시켜먹는 학생들도 있으니 무작정 출입을 차단할 수도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분별한 교정 출입을 자체해 달라는 의미일뿐이며 결코 돈벌이로 악용할 의도는 없다”며 “학생들의 교통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전남 첫 중대재해법 재판 시작 ‘주목’

## 광양 근로자 파이프 끼임 사망사건 회사대표 혐의 부인...법정다툼 예고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광양 현대스틸산업 파이프 끼임 사망사건’(11월 2일자 광주일보 6면)의 재판이 시작됐다.

현대스틸산업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소규모 사업장 유예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와 함께 현대스틸산업 측 관계자 등 총 피고인 7명 중 3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 광양 현대스틸산업 울촌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에 금속파이프

에 끼여 숨진 것과 관련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사고의 도의적 책임과는 별개로 관련법상 안전 의무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사고 경위에 비추면 면책하기 힘든 사고였고,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노동계는 A씨의 혐의부인을 비판했다. 권오산 민주노동당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사건이 처리가 지체되고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경미한 처벌로 이어지고 실효성 없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찬=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코 곤다”며 동료 살해...항소심도 징역 20년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다름나 동료를 살해한 20대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박정훈)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적체장에서 동료 B(4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해 재판에 넘겨졌다. 물류센터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여름 휴게실에서 B씨의 심한 코골이 때문에 휴식에 방해받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입박에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에도 B씨가 코를 골자 “다른 데 가서 자면 안되겠냐” 등의 말을 하면

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휴게시간이 종료된 후 모든 직원이 안전수칙 교육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A씨와의 말다툼을 거론하는 등 문제를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업무를 보던 B씨에게 다가가 수습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위해 주·야간으로 열심히 일하던 B씨가 극심한 고동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시절 뇌전증을 앓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 피해자 유가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면서 항소사각의 이유를 밝혔 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회삿돈 44억 빼돌려 빚 갚고 도박...항소심도 징역형

지역 유력건설사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빚을 갚고 도박을 한 50대 여성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오영상)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횡령죄에 대해 징역 5년, 사기 죄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광주 유력 건설사 공동 대표이사로서 취임해 부동산 매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은행에 예치한 회사 자금 44억여원을 2018년 3월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모 대학교수에 8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합작회사의 토지와 건물

을 매입하려는 광주 지역 유력 B건설사 사주에게 ‘합작회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부동산 매입을 도와주겠다’며 설득해 B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A씨는 은행에 예치한 회사 자금 44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17억여원을 빚을 갚는데 쓰고 나머지 23억여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지 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점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장기징역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큰 점, 피해 회복이 된 점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